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 김건희 연관성은 못찾아

내란특검팀, 180일 수사 완료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김건희, 계엄 직후尹과 크게 싸워 추경호 외 국민의힘 의원 기소 없어 혁신당, 사법부 불기소 처분 규탄

12·3 내란 사태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4일까지 180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내란의 연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또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8일 출범한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군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관계자, 정치인 등 27명을 기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일반이적죄·위증 등 혐의로도 잇따라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내란우두머리방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상목 전 기획

재정부 장관도 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책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당사로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 보호 책무를 위반해 비상계엄에 동조·협력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북풍 몰이’를 통해 계엄 요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것도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김건희씨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인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씨의 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측근 조사 결과 김씨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계획한 게 있었는데 다 망쳤다”며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 종료일인 지난 14일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나경원·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 체포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외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셈이다.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검 1명, 특별검사보 6명, 검찰·공수처·경찰 등 수사 인력 182명 등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위주로 하는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성한다. 특검은 별도의 백서를 만들지 않고 수사결과보고서를 이날 말에서 내년 초 중 대통령실·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의 밤 대법원의 심야 긴급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화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2차 내란 종합특검” vs 野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으로 남은 의혹 밝혀야”

장동혁, 개혁신당 향해 협력 요청
“李 정권 막기 위해 힘 모아야”
국회 천막농성 재개로 대어투쟁

거대 양당이 각자 내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함께 특검 정국이 물아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내란 종합 특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모아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두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에 한해 마무리하지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정치인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현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몰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수석대변인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개혁신당과 함께 공조하겠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앞 본청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라며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막힌 타이밍에, 기가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표는 개혁신당을 향해 “이재명 정권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저지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겨냥해 대어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김범석 쿠광 이사회 의장,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與野 “책임회피 말라”

불출석 사유에 ‘비즈니스 일정’ 무책임한 모습에 정치권 격분

김범석 쿠광Inc이사회 의장이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광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낸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기업 총수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쿠광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고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밝혔다.

매해마다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한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이었기에 정치권은 격분한 모습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쿠광은 노동 실태와 산업안전 문제,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돼 온 기업”이라며 “그런 기업의 총수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돈 벌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김 의장, 강한승

전 쿠광 대표, 박대준 전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국민 안보 위기를 초래한 쿠광 책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궁리만 한다면 큰오산”이라며 “무책임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최고책임자인 범김(김 의장)과 이번 사태의 핵심 증인들 모두가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는 쿠광 경

영진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처사”라며 “국회 청문회는 국민의 질문을 대신 묻는 자리다. 그 자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광의 고객이자 피해자인 국민앞에 서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광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부의 침해사고 조사 시 귀책기업의 방해가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귀책기업이 조사단 운영비 전액을 지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태홍 기자